

농어촌公, 투명·신뢰 기관으로… '규범준수' 국제인증 획득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경영과정 전반 투명성·공정성 강화
조직문화 관리체계로 윤리경영 기틀
규범준수 캠페인 등 체감 경영체계
김인중 사장 “국민·농어민 신뢰 지속”

한국농어촌공사가 갖춘 윤리·준법경영 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준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사는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은 법령과 내부규정, 윤리기준 등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는 이번 국제 심사에서 경영과정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청렴·윤리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이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심사·인정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서를 건네받고 있다. /농어촌공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조직문화 관리체계인 'KRC(공사의 영문 명칭) Clean Wave 1·2·3'을 도입해 윤리경영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웨이브 1(개인

의 변화) ▲웨이브 2(조직의 변화) ▲웨이브 3(모두의 변화)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규범준수 문화 내재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부패 위험 식별 및 관리체

계 강화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김 사장은 “이번 인증 취득은 공사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농어민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영 전반에서 윤리와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사는 창립 1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청사진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의

3대 축은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신뢰 재회복이다.

성장동력 재충전은 농어업 식량안보 강화, 미래농업 육성, 농어촌 공간 혁신, 농어촌 에너지 전환, 유역별 물 환경 개선 등 본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확장을

목표로 한다.

경영구조의 재설계는 인공지능(AI) 전환, 재무건전성 강화, 재무위험 관리,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경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신뢰 재회복은 윤리·안전·공감 캠페인(KRC Clean Wave 1·2·3)을 비롯해 지역사회 보편적 서비스 확대, 수자원 협약·화충 활동 등을 포함한다. ESG(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고도화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투명 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의명신고로 체불임금 48.7억 청산 성과

노동부, 166곳 집중 기획감독 실시
105곳서 4538명에 임금 즉시 지급

재직 중에는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숨어있는 임금체불'이 의명 신고를 통해 대거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의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 의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91.6%인 152개 사업장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150곳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8곳은 즉시 범죄인지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임금체불이었다. 118개 사업장에서 총 4775명에게 63억 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연장·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노동' 사례(12곳)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업장(2곳)도 포함됐다.

실제 한 음식업체는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2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고, 한 호텔은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 17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따라 118개 사업장 중 105곳에서 4538명에게 48억7000만원이 즉시 지급됐다. 자금난으로 체불이 발생했던 병원과 제조업체의 경우 법인 자금 전용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이 이뤄졌다.

반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에 응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은 형사조치 대상이 됐다. 한 병원은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직원 13명의 임금 4억원을 체불했고, 일부 제조업체는 수주대금 지연 등을 이유로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 위반(31곳), 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카드태깅 기록과 임금 산정 자료를 포렌식 분석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확인한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위반 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2일부터 '재직자 의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감독을 올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 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의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광양시 레미콘 7개 사업자 담합 적발

22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민간공사용 판매가 담합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 가담사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7개사다. 이들은 최근 시멘트와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

까지 약 2년 동안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동안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7개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을 원칙으로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7개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을 약 1400억원으로 산정해 과징금 총 22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자진시정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총 합산 156.28MW 규모로 추진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 진행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육상풍력 고정 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총 156.28MW(메가와트)의 규모로 주민들과 '바람'을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재생에너지자를 일정 기간 지정된 가격에 공급할 사업자를 입찰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육상풍력 입찰용량은 총 230MW 내외로 공고됐고 4개 사업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1월 하순 사업내역서 평가가 실시됐다.

년스 체계 구축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기관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기관 '자산관리팀'은 '안전경영팀'으로 확대 개편돼 근로자 안전, 근로환경 개선, 사업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2026년도 정기증원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포함됐다. 증원 인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마스터플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 부서에 집중 배치돼 정책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개편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은 경영·정보화·연구 분야별 3본부 34팀 체제로 운영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기관이 AI기반 고용서비스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육상풍력 경쟁입찰' 사업 3개 선정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설치된 육상풍력 발전기.

/뉴스

평가는 2단계로 이뤄졌으며 1차는 산업·경제효과 및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 평가, 2차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합산 156.28MW 규모의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정된 사업은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진행될 예정이다. 바람이라는 공공재 혜택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